우암학원 창학73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全南日報

somic
서울디엠씨
아파트·타운하우스 개발 사업

제9767호 2023년 6월 9일 금요일 음력 4월 21일

청년·신혼부부 몰린 '화순 1만원 주택' 도내 확산

월세 1만원 주거부담 줄여 인구유입
화순군 보증금·리모델링 전액 지원
道, 내년 '으뜸전남 청년주택' 도입
지방소멸기금 활용해 100호 공급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부담을 줄이고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화순군의 '1만원 주택'이 전남도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된다.

전남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광역사업으로 육성, 매년 1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화순군의 '1만원 주택'은 청년·신혼부부가 1만원의 월 임대료를 내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사업으로 임대보증금·리모델링 비용은 화순군이 전액 지원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화순의 '1만원 주택'에서 착안한 '으뜸전남 청년주택'(가칭)이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다.

전남형 '1만원 주택'은 도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매년 100호 공급을 계획 중이다.

특히 해당 재원은 행정안전부가 전남도에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방소멸 위기를 지역이 주도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난해 도입됐으며 행안부가 전국의 인구감소지역에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원한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남도는 총 3080억원의 기금을 확보했다. 이는 광역단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액수다.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화순의 '1만원 주택'은 월 1만원만 내면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임대주택 사업이다. 1998년에 지어진 아파트 20평형(66㎡) 규모로 두개의 방과 거실·주방까지 갖춰져 있어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거주하기에 적당하다.

화순군은 한해 48억원씩 총 4년간 192억원을 투입한다. 화순군도 내년부터 사업비를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1만원 주택'은 전국 최저 임대료로 관심을 모았으며 최근 화순의 1차 모집과정에선 50가구를 뽑는데 506명이 응모해 10.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화순군의 1만원 주택은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최근 논란이 된 '깡통 전세'로 인한 임대보증금 피해를 볼 걱정이 없어 청년과 신혼부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내년부터 전남도가 '1만원 주택'을 광역사업으로 추진하면 수혜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1만원 주택'의 전국적인 확산도 기대된다. 현재 화순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들의 정책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내실 있고 체감도 높은 기금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지자체의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1만원 주택'의 인구 유입 효과가 입증된다면 우수사례가 될 전망이다.

행안부가 우수기금사업을 발굴한 지자체에 더 많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할 계획이어서 기금 확보 규모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화순 '1만원 주택'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취지와 잘 부합하는 사례"라며 "현재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중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면, 저렴한 임대료 혜택뿐만 아니라 주변 인프라도 확충할 수 있어 청년 인구 유입에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3면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광주사람들(529/1000)

이 기 훈
싱가포르국제학교
광주러닝센터 대표

▶관련기사 16면

충장22 비전선포식 광주 동구 충장22 비전선포식이 8일 충장로5가 충장22에서 임택 동구청장과 윤병학 충장22문화사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머찌그레이스모델협회소속 시니어 모델들이 축하 공연 패션쇼를 펼치고 있다. 복합문화공간인 충장22는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위축된 상권을 살리고 문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문화예술 거점 공간이다. 나건호 기자

광주시민사회 "정부·여당, 탄압 중단하라"

시민모임 등 82개 단체 회견
"단체 헐뜯기·수사 등 도 넘어"

정권을 비판하는 시민단체를 향한 정부와 여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광주 시민사회가 이를 규탄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 등 82개 단체는 8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특정 언론사가 시민모임을 향한 악의적 보도를 낸 것을 시작으로 여당이 발맞춰 '국고털이', '과거사 비즈니스', '조폭' 등에 비유해 지난 14년동안 근로정신대 피해자 인권회복에 앞장서 온 시민모임에 대한 비방과 모략을 선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작년부터 제주와 창원의 진보활동가들을 구속하더니, 광양에서 농성 중인 한국노총 조합원을 폭력적으로 진압해 구속시킨 것은 물론 광주에서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잇따라 수사 선상에 올리는 등 시민사회노동단체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호소했다.

단체는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아예 사회적 암덩어리나 적으로 돌리고, 탄압을 통해 보수층 결집에 나선 것"이라며 "여당이 발족한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도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상식도 염치도 없는 내용"이라고 성토했다.

단체는 "묵묵히 시민권익과 민주주의,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헌신해 온 시민사회노동단체에 불온한 딱지를 붙여 탄압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 일궈진 민주주의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역사 퇴행과 시민단체 옥죄기에 맞서 어떠한 모욕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연대의 손을 더욱 굳건히 잡으며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